

F1 조직체계 분쟁 일단락 올 대회 '성공 원년' 돌파구

카보 前대표 가치분 신청 기각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 대회 운영법인인 카보(KAVO) 정영조 전 대표가 자신을 해임한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치분 법원에서 기각됐다.

전남도와 F1 대회조직위원회가 지난해 F1 대회 개최 준비 및 운영을 맡았던 KAVO 기능을 흡수, 대회를 주도하는 체제로 운영구조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분쟁이 일단락됨에 따라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가치분 기각, 분쟁 일단락? =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재강)는 30일 카보 주주사인 '엘브릿지 홀딩스(MBH)' 공동대표이사인 정영조·장홍호씨가 낸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및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치분'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정 전 대표와 장씨는 지난 1월 카보 대표이사과 기획마케팅 부분에서 해임되자 이를 의결한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하자가 있다며 분안 소송에 앞서 낸 효력정지 가치분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카보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의결이 모두 적법하다고 보고 정 전 대표와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사회 결의에 대해 "카보 이사회는 정관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사회를 소집했다"면서 "정씨가 이사회 소집요구를 거절한 것이 정당했다거나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정 전 대표와 장씨가 이사회 결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사회에 이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와 결의내용에 하자가 있어 주주총회 결의가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주총회가 법령이나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나 소집절차 없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해 총회를 개최하는데 동의하고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뤄졌다면 그 결의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주주총회 결의 내용이 MBH에

F1대회 국내 개최권을 부여한 FOA(Formula One Administration)와의 프로모터 계약과 카보 주주간 협약서에 반한다 하더라도 카보 정관에 반하지 않는 이상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또 "MBH에 카보 이사 또는 대표이사 지명권을 부여하는 주주간 협약서 취지도 MBH가 지명한 대표이사나 이사를 주주총회의 결의로도 해임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조직 정비, 대회 순항하나 = 전남도와 F1조직위원회는 가치분 신청 기각 결정이 향후 소송에 영감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전남도와 F1 조직위 주도의 대회 운영 구조 개편도 조속히 마무리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이번 가치분 신청 기각 결정이 향후 소송에 영감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전남도와 F1 조직위 주도의 대회 운영 문제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음에 따라 이제 대회 성공 개최에 총력을 쏟을 수 있게 됐다는 기대도 적지 않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U대회 선수촌 동의안 처리 일단보류

광주시의회 본회의

일부 의원 강한 반대

다음달 4일 표결처리

광주시의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선수촌 건립지원 동의안'(이하 선수촌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의원들의 강한 반대로 처리가 보류됐다.

시의회는 다음달 4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곧바로 표결처리하기로 했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 앞서 전체 의원간담회를 열고 지난 29일 행정자치위를 통과한 '2015 광주U대회 화정지구 도시공사 사업참여 선수촌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3시간여 동안 토론을 펼쳤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김은미·서정성·송경중·전주연·조오섭·진선기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동의안 처리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내달 4일 본회의의 상정으로 결정됐다.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은 "U대회 선수촌의 중요성을 감안해 시의원 개개인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판단할 수 있도록 본회의 상정을 연기하기로 했다"라며 "다음 본회의 때는 전체의원 간담회 없이 곧바로 표결처리해 가부를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30일 대회의실에서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전남 상임위를 통과한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선수촌 건립지원 동의안' 본회의 처리 여부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날 전체의원 간담회에서는 U대회 선수촌 건립지원 동의안의 타당성을 놓고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동의안 처리에 난색을 표명한 의원들은 ▲사업예산서 조건 ▲수의계약의 적법성 ▲현금청산세대 예측분 ▲조합 이행각서의 법적 효력 ▲세입자 및 비조합 세대들의 이주 대책 의혹을 여전히 제기했고, 일부 의원들은 현재 조건으로 시공사 경쟁 입찰 등 정당성 있는 절차를 밟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정성 의원은 "조합원 현금청산세대 중 10%를 초과해 발생하는 조합원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다는 조

항이 있고, 이에 따라 조합 측은 98% 재입주 희망 동의를 받았다고 하지만, 만약 재입주를 희망하지 않는 조합원이 늘어날 경우 광주시의 재정적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동의안 처리 강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해야하고, 특별한 대안 없는 한 표결을 통해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은 "동의안 처리를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었다"라며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의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했고,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조

항을 수정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주연 의원을 제외한 의원 5명이 찬성한 가운데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행정위가 의결한 U대회 선수촌 지원동의안에는 화정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조합원 분양물량의 현금청산세대 중 10% 초과분과 일반 분양 미분양 물량의 10%를 광주도시공사가 인수하고 이에 따른 재정적 소요를 광주시가 이행 보증하는 조건이 담겨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과학벨트 광주·대전·대구에 확대 조성을"

광주·전남 국회의원 17명 삼각벨트 지지 성명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국회의원 17명은 30일 "과학벨트 예산을 추가 확보해 대전·광주·대구의 3개 연구개발특구지역으로 확대 조성하자"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과학 벨트 입지지역으로 기초연구역량과 연구성과의 산업화 기반이 검증된 대전·광주·대구 연구개발특구 관할지역 중에서 선정하되, 나머지 거점에 기초 과학연구원 본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내륙 삼각 벨트 방안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과학벨트사업은 3조

5480억원이 들어가는 대형국책사업으로, 자치단체 간 사활을 건 유치경쟁 때문에 여·야 갈등을 넘어 여·여와 야·야 간 분쟁과 당·정·청 불화로 국론이 사분오열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진단한 뒤 "7년간 연구개발비 10.5조원 확보를 통해 과학벨트를 특정지역 독식뿐이 아닌 R&D특구 삼각벨트로 확대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이어 "올해 정부 R&D예산은 14.9조원으로 4년 전 2007년 9.81조원에서 매년 평균 11.4%(약 1.3조원)씩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주어로

도 매년 1.5조원씩 7년간 10.5조원의 연구개발(R&D)예산 확보가 가능하며 과학기술투자 확대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창출이야말로 국가의 사활이 걸린 중대과제라는 점에서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나아가 "과학벨트 사업이 세중시 백지화와 맞물리며 정치상황이 악화되면서, 지난해 말 정부·여당의 날치기 처리로 인해 입지선정을 둘러싼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과학벨트는 기초연구진흥과 연계 사업화로 미래 신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대한민국 50년 먹거리리를 만들자는 국가백년대계"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취득세 감면 즉각 철회하라"

광주지역 5개 구청장 공동 회견

광주지역 5개 구청장이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시 구청장협의회(회장 유태명 구구청장)는 30일 "지방재정 건전화에 역행하는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광주지역 5개 구청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3·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서 발표된 취득세 감면 방침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어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며 "정부는 취득세 감면조치를 당장 철회하거나 구체적인 국비 보전 대책을 마련한 뒤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감세 조치로 인해 광주시의 세수감소 규모는 총 386억 원으로 예상되고, 자치구별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은 ▲동구 41억원 ▲서구 39억원 ▲남구 50억원 ▲북구 66억원 ▲광산구 47억원 등 총 243억원 규모로 엄청난 세입이 감소한다"라고 전 망하고 "이로 인해 사회복지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폭증하는 행정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지



광주시 구청장협의회는 3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득세 감면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왼쪽부터 민형배 광산구청장·김종식 서구청장·유태명 동구청장·최영호 남구청장·송광운 북구청장. /나명주기자 mjna@

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시책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태명 동구청장은 "시·도지사 협의나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등 지방여론 수렴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음에도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앙집권적 사고의 전형"이라며 "시·도지사 협의회,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호 남구청장은 "그나마 재정이 부족해 올해는 남구청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8개월분밖에 책정하지 못 했는데, 취득세 감면을 통해 50억 원이 줄어들 경우 2개월분의 인건비가 또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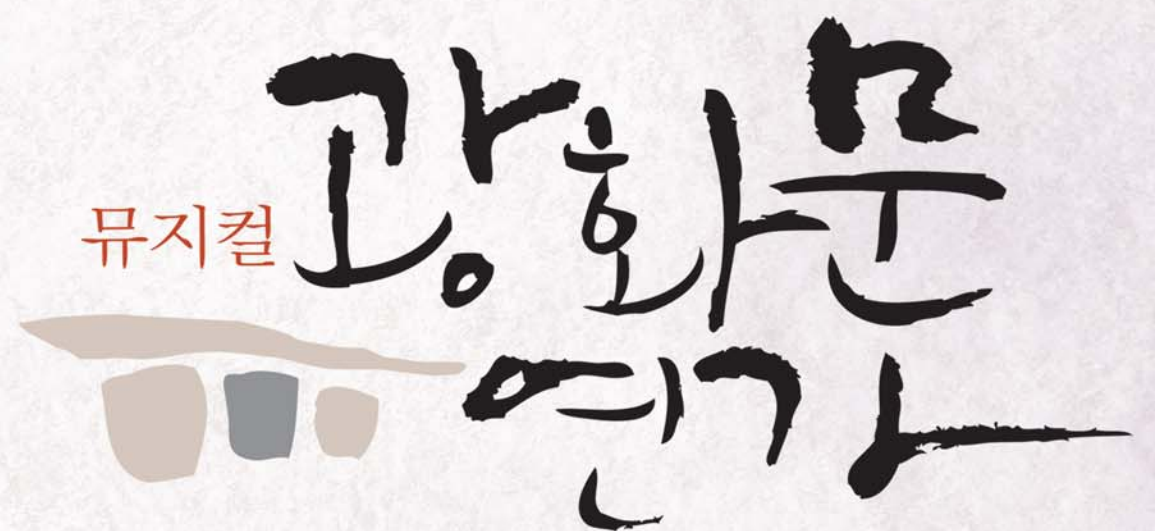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일보 창사 59주년 기념

www.musicalyounga.com

CAST 송창의, 윤도현, 리 사, 임병근, 허 규

이제 모두 세월따라 흔적도 없이 변해 갔지만 덕수궁 돌담길엔 아직 남아 있어요.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



2011년 4월 22일(금)~24일(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 주 최 | 광주일보 KBC | 주 관 | KBC미디어컴 · 영우엔터테인먼트

| 공연시간 | 22(금) 오후 8시 · 23(토) 오후 3시 · 7시 30분 · 24(일) 오후 3시 | 티켓가격 | VIP석 110,000원 · R석 99,000원 · S석 88,000원 · A석 66,000원 · B석 55,000원

| 예매처 | 인터파크 · 쇼티켓 | 공연문의 | 062-220-0541

